

교육물가 상승 전국 최고 광주 학부모들 허리 휨다

통계청, 7.2% ↑... 생활물가 상승률도 평균 웃돌아

대학 납부금과 학원비 등 올해 광주의 교육물가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올라 광주지역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장바구니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 상승률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등 물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광주의 교육물가는 7.2% 뛰었다.

이는 전국 평균(5.6%)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치솟았다. 6대 도시 상승률의 경우 ▲인천(6.1%) ▲울산(5.9%) ▲부산(5.6%) ▲대전(5.1%) ▲대구(5.0%) 순이다.

광주의 교육물가가 급등한 것은 올 들어 대학납부금과 대학·고입학원비 등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는 올 초 국·공립대 납입금이 9.3% 오른 것을 시작으로 각종 입시 학원비 인상이 잇따랐다. 대입학원비의 경우 올 들어 단과반과 종합반이 각각 21.7%, 15.4%나 뛰었다.

같은 기간 고입학원비도 16.9%까지 치솟았으며 태권도 학원비와 보육 시설 이용료도 각각 14.3%, 14.2%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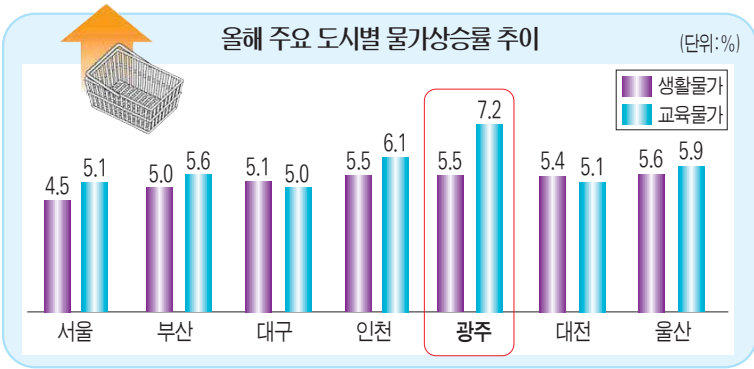
올 들어 생활물가도 급등세를 나타

내고 있다. 광주는 올해 생활물가가 5.5% 올라 전국 평균(5.1%)을 크게 웃돌았다.

이같은 물가상승률은 6대 도시 가운데 울산(5.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대전(5.4%), 대구(5.1%), 부산(5.0%) 등을 상회하고 있다.

전남지역 생활물가 상승률도 5.6%나 치솟으며 전국 상위 수준을 기록, 물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발 묶인 기아차 "DJ센터 주차장도 비좁아" 대중컨벤션센터 야외주차장으로 옮겼다. <관련기사 7면>

화물연대 광주지부 기아자동차 카캐리어분회의 파업이 열흘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 광주공장측은 평동산단 차고지 등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22일 부터 완성차 270여대를 김/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쇠고기 원산지 단속 실효성 없다

인력·기술 부족에 범규 통일 안돼 유예기간 없어 음식점들도 큰 불만

정부가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를 모든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 인력 부족과 단속 근거가 되는 주요 법규의 기준이 서로 달라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적용 기준 서로 달라 혼선 = 정부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지난 22일부터 현행 매장면적 300㎡ 이상에서 100㎡ 이상

음식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원산지 표시 음식점은 141개소에서 3천158개소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또 22일자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농산물관리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 시행령은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기업·기숙사·

공공기관·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모두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 업소를 확대했을 경우 음식점만 무려 1만2천~1만3천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청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은 100㎡ 이상 음식점까지, 농산물 품질관리법은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기준이 통일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단속 인력·기술 부족 = 부족한 단속인력도 문제다. 광주지역 일선 구청과 농관원 전남지원 등 원산지 표시 단속 인력은 200여명. 그러나 이

들 전부를 상시 단속인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데다 각 구청별로 3~4명의 인력이 강화된 기준에 따라 크게 늘어난 원산지 단속 대상을 모두 점검하기에는 벅찬 실정이다.

또 쫓소의 경우 원산지를 관별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한우가 아닌 육우 사이에는 국산과 수입산을 구별할 수 없으며 호주산, 뉴질랜드산, 미국산을 구별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업소 불만도 커 = 음식점 주인들의 불만도 크다. 광주 Y식당 주인 김모(48)씨는 "메뉴판에는 한우라고 표기해 놓고 실제로는 미국산 쇠고기 내놔도 구별하기 힘들 것"이라며 "식당 업주들도 준비가 안됐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사)한국 음식점중앙회 광주지회 관계자는 "쫓발 민심을 봉합하기 위해 전 음식점을 대상으로 육류 원산지 표시를 시행할 정부 시책에 반대한다"면서 "충분한 홍보와 6개월 정도의 제도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黨政 "미 쇠고기 고시 당분간 유보"

한·미 통상장관급 쇠고기 추가 협상에서 양국이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 등에 합의했으나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당분간 유보된다. <관련기사 3·4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한미간 쇠고기 추가협상에 따른 향후 검역대책 내용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고시 및 발표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정부 청사에서 실무 당정회의를 갖고 "추가협상 및 검역 지침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며 고시 시점에 대해 "서두르지 않는다"는 합의했

다고 한나라당 조운선 대변인이 전했다.

당초 정부는 23일 중앙 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추가협상 결과를 부처에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수정안을 확정된 뒤 행정안전부에 고시 제재를 의뢰할 예정이었다.

수정안은 수입위생조건 부칙 7~9조에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30개월 미만 인증없는 수입 물량은 반송한다 ▲머리뼈·뇌·척수 등이 발견되면 해당 물량을 반송한다 등의 추가 합의 내용이 덧붙여진다.

당정이 고시를 서두르지 않기로 함에 따라 새 수입위생조건에 발효와 이에 따른 검역절차 재개 등도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한편 정부는 "한·미 양국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워싱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을 벌여 미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수출용 30개월 미만 증명 프로그램'(이하 한국 QSA)의 운영을 통해 국민적 우려가 제기됐던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차단키로 했다"는 추가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社告

제 27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7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김선옥 교수 '여성 요실금의 원인과 치료'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27일(금) '제27회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 의료진이 직접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여성 요실금의 원

인과 치료'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김선옥 비뇨기과 교수로 중년 여성들의 고민거리인 요실금의 진단과 치료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강좌 내용은 다음달 1일(화)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 여성 요실금의 원인과 치료
- 강 사 : 김선옥 전남대병원 비뇨기과 교수



-전남대 의과대학 졸업
-대한비뇨기과학회 정회원
-대한비뇨장에 및 요실금학회 정회원
-전남대병원 임상전임강사

- 일 시 : 6월 27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2-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

비전과 가치를 창조할 꿈을 가진 인재를 찾습니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